"일 많은데" 광주 공무원, 연가 절반도 안 써

광주 5개 자치구 연가사용률 평균 44.8%
보상비만 매년 60억 원…재정 부담에 고심

"공무원 월급 박봉인데 연가보상비라도 챙겨야죠."

광주지역 각 자치구가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가사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면서 재정부담이 커진 자치구들은 연가보상비 지출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광주 5개 자치구의 직급별 연가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들의 연가사용률은 평균 44.8%로 집계됐다.

각 구별로 보면 북구가 지난해 50%로 연가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 48%, 광산구 46%, 남구 41%, 동구 39% 순이었다.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은 직급이 올라갈 수록 저조했다.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들이 정작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사용률이 가장 낮은 동구를 보면 9급 공무원이 61%로, 8급 56%, 7급 41%, 6급 34% 수준이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가사용률은 33%에 불과했다.

남구도 9급과 8급이 각각 51%, 53%인 것에 반해 7급은 38% 밖에 되지 않았다. 6급과 5급 이상 공무원은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광산구는 ▲9급 63% ▲8급 61% ▲7급 42% ▲6급 37% ▲5급 이상 38%로 조사됐고, 서구는 ▲9급 68% ▲8급 59% ▲7급 43% ▲6급 38% ▲5급 이상 39%였다.

북구는 ▲9급 74% ▲8급 57% ▲7급 52% ▲6급 41% ▲5급 이상 42%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추세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7급 공무원 A씨는 "각종 업무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며 "여유롭게 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가 낮은 9급 공무원들의 경우 하루 5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하루 12만 원 이상의 연차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6급 공무원 B씨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인 탓에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연가를 쓰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최대 15일까지 보상비를 주는데 하루 10만 원만 계산해도 150만 원 수준이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연가를 쓰지 않으면서 광주 5개 구가 지출하는 연가보상비 금액만 매년 6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매년 평균 19억 원 상당을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로 집행, 광산구도 약 15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남구는 10억 원으로 동구와 서구도 각각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가 줄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들은 연가보상비 지출을 아끼기 위해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지원과 공무원은 "올해부터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2일 이상 연가를 쓰면 문화탐방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20일까지 주던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15일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45일 이내로 단축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신청방법도 서면과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신학기 앞두고 학용품 준비' 새학기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구·완구 종합시장에서 어린이들이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서울 6%, 부산·전남 100%…초등늘봄 참여, 지역격차 심각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 학교 수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 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가장 적은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따른 거부감과 과밀학교 등 학교 여건이 충분치 않아 현장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며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은 1330개교 중 975개교(73.3%)가 참여해 세 번째로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전북(75개교·17.9%)과 울산(24개교·19.8%)의 참여율도 20%대를 채 넘기지 못했고, 광주(32개교·20.6%), 인천(60개교·22.9%), 강원(84개교·24.1%), 충남(118개교·28.6%) 등도 30%를 넘지 못했다.

그 외 지역 늘봄학교 수와 신청률은 ▲제주(55개교·48.2%) ▲세종(25개교·47.2%) ▲충북(100개교·39.2%) ▲경북(152개교·32.1%) ▲경남(159개교·31.3%) ▲대구(70개교)·대전(45개교) 각각 30.2% 등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명단을 보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교인지 알 수 있다. 다만 경기와 경남은 오는 19일까지 명단을 밝힐 계획이다.

운영 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늘봄학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계신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유나 기자

광주 동부소방, 골든타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6일 골든타임 확보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광주남부소방, 승촌보 캠핑장 안전나눔 캠페인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승촌보 캠핑장에서 겨울철 안전한 캠핑 즐기기를 위한 안전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화순경찰, 주민의견수렴 소통방 운영으로 주민참여치안 전개

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주민참여 공동체·플랫폼 치안을 활성화를 위해'주민의견수렴 소통방'을 운영으로 주민참여·정성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소방, ㈜곡성안전유리 맞춤형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15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곡성안전유리에서 맞춤형 현장지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소방,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화재안전조사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지난 15일 겨울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소방,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